

독일 통일과 국내외적 환경요인*

김주삼 아태교류협력연구원

논문요약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과 패전국이었으나 1989년 10월 9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통일국가 되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으로부터 서독과 동독이 강제로 분단되고 관리되었다. 독일통일 전 서독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세계 선진국으로 발전하였으나,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계획경제를 도입한 결과 국력면에서 서독에 비해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격차를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전형적인 흡수통일방식이었다. 독일통일의 국내외적 환경요인은 국내적으로 동서독이 분단 상황 하에서도 정부와 민간부문차원에서 꾸준한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진행한 것이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첫째, 국제정세가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와 미소 냉전체제가 종식된 점, 둘째,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동서독이 포함된 '2+4체제' 시스템 가동의 성과이다. 셋째, 독일통일은 당시 유럽지역의 나토(NATO)와 유럽연합(EU) 등 정치적, 군사안보적, 경제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목표가 일치되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독인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이 내재돼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내적 갈등요소들은 하나씩 완화돼 갔다. 이러한 독일통일 갈등요소들은 분단체제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의 통일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주제어 : 동서독 분단, 베를린 장벽, 독일통일, 국제질서, 2+4체제

* 이 논문은 한국정치사회연구소·한국국회학회·10.18민주항쟁연구소가 2020년 10월 23일 대전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독일 통일 30년, 한반도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I. 서론

1989년 11월 9일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후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대량 탈출하면서 동서독은 1990년 10월 3일 역사적인 통일 국가로 거듭났다. 동서독은 통일 후 사회적·경제적 통합과 심리적 갈등 등의 미해결 과제가 상당히 존재하였으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완화되고 올해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하였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과 전범국으로 종전 후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전승 4개국에 의해 강제로 동서독이 분단되고 분할통치를 받게 되었다. 당시 동독지역은 소련이 분할통치하고, 서독지역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이 관리하였다. 이후 동독은 소련식 사회주의체제를 수용하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도입하였으나, 서독은 미국 등 서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결과 세계 최고의 선진 복지국가 지위를 갖게 되었다.

그동안 1990년 동서독이 통일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 독일통일 후 3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여러 학술자료와 통일사례 연구를 통해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과정, 통일 후 독일의 사회통합과정 등에 관한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독일통일은 서독에 의한 동독의 흡수통일방식이었다. 이러한 서독의 동독 흡수통일 방식은 분단국인 한반도의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과 타이완 등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본다. 또한 독일통일은 동서독의 민족통일달성과 같은 중요성에 더하여 분단국의 통일방식과 당시의 국제질서와 국제정세 및 동서독의 실질적인 역할 등은 당연히 분단국의 연구대상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올해 독일통일 30주년이라는 시점에서 그간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에 대한 국내외적 환경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

다. 그 이유는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졌는가? 독일통일 전 동서독의 노력과 교류협력은 어느 정도였는가? 당시 국제환경은 독일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으로 주도국의 역할은 어떠한지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2장에서 올해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당시 독일통일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정치 관련 이론과 국제기구 등의 고찰을 통해 독일통일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국제정치 이론과 국제기구들이 당시 독일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1990년 독일통일에서 동서독 정부와 민간부문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국내적 요인을 분석하며, 제4장에서는 당시 국제정세와 독일통일에서 실질적인 국제회담으로 평가된 ‘2+4 회담체제’는 누가 주도했고, 어떻게 작동됐는지 국제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본 논문의 함의와 결론을 도출하고, 독일통일이 향후 분단국인 한반도 등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독일통일 관련 이론과 국제관계

독일통일은 1989년 11월 9일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통일로 이어졌다. 30년 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국제정치현상은 왜 나타났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제정치학적 측면에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분단과 독일통일 문제는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즉 독일의 재통일은 대내적으로 동서독의 교류협력도 중요하지만 당시 미국과 소련 등이 대외적으로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력은 국제체제를 새롭게 전환시켰을 정도로 막강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본다. 독일통일은 동서독 내부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에 적용시

킬 수 있는 국제정치의 주요 이론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국제정치에서 한 국가의 존립과 독립의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국가의 존재 의의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모두 패전국으로서 1945년 패전 후 45년간 전승 4개국의 분할통치 속에서 1990년에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고 현재 주요 선진국 G-7로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최고의 위치에 서 있다. 독일통일 문제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통일과정에서 개별 국가와 국제체제의 상호관계로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조지프 S. 나이는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의 이동과 관련하여 힘 (Power),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헤게모니(Hegemony)의 3가지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세력균형을 국제관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했다(조지프 S. 나이 1991, 35-45). 그는 강자의 위협에 대한 약자들의 견제장치인 세력균형을 국제관계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 개별 국가의 독립과 위협에 대한 동맹 그리고 지리적인 문제 즉 지정학적 문제 외에 국가 간의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지프 S. 나이 1991, 35-45).

독일통일은 1990년 당시 유럽지역에서 있었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에 동서독이 미소 양극체제 속에서 존재한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와 같은 양측의 안보공동체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존 베일리스와 스티브 스미스는 국제정치를 분석하면서 세력균형에 동맹 개념을 적용하여 냉전체제에서 발생했던 유럽지역의 동서진영과 나토((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체제 분석을 했는데, 이는 세력균형의 전형적 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다(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2007, 173).

주지하다시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미국중심의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 간의 냉전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냉전체제가 더 격화되고 양 진영의 상반된 이념이 서로 노골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으로까지 발생했다. 미소 냉전체제는 이후 1990년 독일통일 전까지 계속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세력 간 치열한 체제경쟁과 대립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따라서 세력균형 이론은 동서독이 통일 전까지 소련의 공산진영과 미국의 자유진영 속에서 미소의 하위 개념으로 그 궤를 같이 해 왔다는 점에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러한 미소냉전체제 하에서도 동서독의 특징은 동서독 상호 교류와 상호왕래가 1990년 통일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당시 동서독 상황은 미소 냉전체제 내에서 동서독 문제를 다시 한번 고찰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1990년 독일통일은 동서독 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시 미국과 소련이 독일통일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달라 동서독에 대해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독일이 통일되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독일통일은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당시 소련의 몰락 전까지 미·소가 세력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독일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세력균형론이 보다 설득력이 얻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한편 독일통일 분위기는 미소 냉전체제가 막판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1989년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 해체선언을 한 몰타선언 전부터 이미 진행돼 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냉전체제 후에 국제체제는 세력균형 관점에서 미소 양극체제를 미국과 중국의 'G2(Group of Two)'라는 새로운 세력 균형자로 바뀌었다. 이처럼 세력균형은 1990년대 양극체제의 붕괴 후 잠시 미국중심의 일극체제 현상을 보이다가 소련의 대체 세력으로 부상한 중국, EU(유럽연합) 등이 또다른 형태의 국제질서 내지 국제체제의 변수로 바뀌는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현실주의(Realism)

현실주의(Realism)는 국제관계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치이론으로 제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국제관계에서 국가(State)를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왔다. 20세기 국제관계 가운데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전형적인 파시스트 국가들로서 자국민들에게 제국의 건설과 전쟁준비 그리고 강자생존 논리와 파시스트 사상을 종용하고 주입시키는데 앞장섰다(민병오, 2011, 214).

현실주의는 국제정치에서 국가를 주요행위자로 보고 국가가 권력추구라는 본능적 속성과 국가권력 유지를 위한 생명력 유지라는 영속적 본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존 베일리스 외 2007, 170-171). 주요 현실주의자들을 살펴보면 고대 투키디데스(Thucydides),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장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케네스 월츠(Kenneth Waltz), 길핀(Robert Gilpin), 미어 셰이머(Mear sheimer), 헨리 키신저(Henry Kissenger)를 대표적인 인물로 포함시킬 수 있다(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2007, 175-180).

현실주의(Realism)는 국제정치를 무정정부 상태로 보고 국내정치보다 더 폭력적이고 나아가 국가소멸까지도 초래될 수 있다는 현실적 관점이다. 또한 국제정치는 국가들의 권력추구에서 강자의 힘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점, 국제정치에서는 국가이익이 우선시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이춘근 2009, 131-142).

이외에도 현실주의(Realism) 국제정치적인 것 외에 세계경제적 측면에서 1945년 전후 미국이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한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하의 국제경제기구도 그 대상이다. 이 경제체제는 세계경제질서를 대표적인 사례인데 패권국가로 주도권을 쥔 미국이 전후

국제질서에서 서구 자본주의 진영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지배·관리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 완전한 패권국가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통일은 미국중심의 자유진영 자본주의 세력이 소련 사회주의 공산진영을 압도함으로써 소련 자체가 내부분열하고 붕괴하는 역사적 선상에 있었다. 소련은 1985년 고르바췌프의 등장과 함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개방: Glasnost)추진했으나, 그동안 다져온 소련(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다(다음백과사전, 2020/11/9). 소련의 몰락은 독일통일을 전후로 하여 소련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적으로 결국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에서도 양극체제의 분열 후 새로운 국제체제로 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례가 유럽연합(EU)의 등장일 것이다.

1990년 독일통일은 당시 국제정세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의 힘의 우위가 나타나 미소 양극체제가 해체되는 역사적 사건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붕괴,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1992년 소련의 해체,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국제체제에서 미국이라는 국제행위자가 상대적 약자를 강력한 힘의 우위로 그대로 붕괴시키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실주의적 시각에 논리적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국제관계에서 현실주의에서 강조하는 초강대국의 힘(Power)을 행사해 왔다. 냉전체제에서 유럽지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결성한 미국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와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zawa Treaty Organization))는 동서진영 군사안보동맹체의 대결장이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1991년에 와해되었고, 기존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과거 자신들이 대항 세력이었던 나토(NATO)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기현상까지 보

였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 서구 자본주의 진영 중심의 나토(NATO)는 국제질서에서 가장 대표적 국제안보동맹체로 부상하였다(민병오 2011, 216).

나토(NATO)는 냉전종식 후에도 유럽과 북미지역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가장 강력한 군사안보공동체이자 군사동맹체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나토(NATO)총사령관을 임명하는 구조에서 미국의 위상과 패권은 현실주의 관점이 그대로 나타난다(민병오 2011, 216-222). 독일통일 후에도 국제질서는 미국이 여전히 초강대국 행위자로서 국제체제를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주의적 논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탈냉전(Post-cold war)

1989년 미국 부시 대통령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몰타(Molta)에서 냉전체제(Cold war system)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가 미국과 소련 중심의 이념적 양극체제(Bi-polar system)가 아닌 제3세력인 중국과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도전세력의 출현을 암시하였다. 미국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질서에서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공산진영 종주국인 소련과 양극체제(Bi-polar system)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국제체제는 1960-1970년대 데탕트(Detente) 과도기를 거쳤다. 이후 데탕트(Detente)의 새로운 국제질서 분위기는 미국의 미중수교로 이어졌고 소련은 재정악화가 심화돼 결국 1990년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에 대한 서막이 되었다(헨리 키신저 2012, 462-465). 물론 미국과 중국의 수교는 1979년 1월 수차례의 협상 끝에 성사됐지만, 미소중심의 냉전체제가 해체된 것은 1989년 12월 5일 몰타회담(Molta summit)에서 “동서가 냉전체제에서 새로운 협력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한 몰타선언이 공식화되면서 동서 냉전체제는 종말을 맞이하였다(위키백과사전 2020/11/10).

미소 양극체제 종식배경은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소련의 미소체제 대결에서의 패배, 소련 내부적 경제악화 상황과도 직결되는데 시대변화에 역행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시스템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소 양국은 1945년 종전 후 이념과 동맹그룹, 체제경쟁과 블럭 형성으로 대결해 왔으나, 데탕트(Detente)체제 이후 소련은 미소경쟁에서 미국경제를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밀렸고, 미소 양국의 국력격차는 갈수록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또 소련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 외 서방국가 EU와 일본 등의 주요 선진국가들과의 체제경쟁 구도를 더 이상 극복해 갈 수 없는 현실적 한계도 내보였다. 게다가 동일 사회주의국가인 중국과도 중소갈등이 대립구도로 격화되는 악재까지 겹쳐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련의 제국적 과대팽창과 중앙계획경제 체제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뒤떨어진 점도 사실”로 보인다(조지프 S. 나이 2009, 221-224). 당시 냉전해체 배경 이면에는 소련이 당시 국제사회의 다원주의와 자국실리, 국익, 새로운 국제기구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변화추세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시스템에도 원인이 있었다. 당시 시대적 흐름은 1979년 미중수교, 1980년대 동유럽 민주화 바람의 격화, 1990년대 초반 소련 고르바췌프의 실각, 소련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출범, 소련의 공산진영에 대한 종주권 행사 상실 등으로 이어졌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은 공산정권의 붕괴와 시장경제를 도입하였고,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소련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곧바로 새로운 러시아 시대를 만들어 나갔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소 중심의 이념대립의 냉전체제(Cold war system)는 1990년대 자국 실리중심의 탈냉전체제(Post-cold war system)로 전환되었고, 양극체제는 역사적 퇴물로 완전 폐기되었다. 따라서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은 이러한 국제정치의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탈냉전 국제정치의 상징물이 된 것이다.

Ⅲ. 독일통일과 국내적 환경요인

1. 정부부문

독일통일은 유럽지역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5년 7월 17일~8월 2일 열린 포츠담(Potsdam)회의에서 독일분할과 관련된 독일패전 전후 처리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김용구 2006, 828). 독일은 1945년 7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자 전범국으로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영·프·소 전승 4개국으로부터 동서지역 분단과 분할통치를 받게 되었다. 서독은 1945년 분단 후 미국, 영국, 프랑스가 1949년까지 통치하였고, 동독은 소련이 통일 전까지 소련의 위성국가로 관리해 왔다.

“독일문제: 독일은 미·영·프·소 4국이 점령하는 지역으로 분할되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로 남는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독일에는 중앙정부를 수립하지 않기로 하였다. 독일의 완전한 군비해제와 비무장화, 나치당의 해산과 나치당의 근절, 전범의 재판, 그리고 독일교육의 감독 등이 결정되었다. 독일 배상에 관해서는 소련에게 많은 비율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와는 달리 얄타 회담에서는 현물로 배상한다는 원칙을 채택한 바 있다. 소련은 소련의 점령지역에 있는 생산물과 배상으로 획득할 뿐만 아니라 영·미 점령지역에 있는 공장, 기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물자를 배상으로 제공받기로 하였다”(김용구 2006, 828).

1) 서독

서독은 1945년 7월 포츠담 회담 후 미국의 마셜플랜의 원조를 받고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통일 전 서독정부는 1945년~1990년 통일 전까지 콘라도 아데나워 총리(1949~1963년), 빌리 브란트 총리(1969~1974년), 헬무트 콜 총리(1982~1998년)가 대표적인 총리로 재임하였다(통일부 2016, 62-68). 서독은 정부차원에서 2차

세계대전 후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독교 민주당 출신인 초대 아데나워 총리는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¹⁾에 따라 ‘힘의 우위’ 정책을 추진하였고, 1955년 유럽공동체(EC)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하였다. 그 뒤를 이은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Ospolitik)’을 추진하면서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은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서독 내부에서는 동서독 통일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배했다.

서독은 1970년 8월 서독-소련 간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1972년 동서독 간 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73년에 동서독이 국제연합에 동시가입하여 화해와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서독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자유진영과 함께 공동안보와 경제협력을 도모해 나가면서 198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불기 시작한 동유럽 민주화 열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은 동서진영 대립의 상징인 동서독을 흔들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서독은 기민당 헬무트 콜 총리였다. 서독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될 때까지 동독에 대한 일방적 통일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전승 4개국으로부터 동서독이 강제 분단되고 분할통치를 당하면서 ‘통일’을 강조하면 독일민족주의의 부활로 비쳐질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서독은 분단 후 동서진영 간 양극체제가 지속된 가운데 동서독의 통일정책 추진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배경에는 동서독을 둘러싼 국제환경도 있었겠지만 서독은 대동독정책 내에서 내독성이라는 중앙부서를 두고 서독 국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체제, 민주 시민교육, 법치주의, 독일역사, 유럽과 국제사회 이해 등을 교육하고 관리해 왔다.

1)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은 서독이 동독과 국교를 수립한 동유럽국가들과 수교하지 않는다는 대외강경책으로, 1966년 사회민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가 할슈타인정책을 청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1990년 통일 전 당시 서독은 일부 통일반대 세력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장벽 설치 후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까지 동독인 약 30만 명을 서독으로 입국시키는 조건으로 34억 마르크를 동독정부에 제공하는 인도주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서독정부는 독일통일에 대한 찬반 여론에도 불구하고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 전까지 동독에 대한 일관된 교류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한편 서독정부의 동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민족 내부교류차원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저변에는 독일 혈통주의와 서독이 분단 후 그들이 채택한 헌법과 1960년대 신사회운동 등의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인권, 평등, 환경운동 분위기, 난민정책을 추진해 왔던 점들도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김미자 2012, 149-166; 유숙란 2010, 237-255; 고상두 외 2011, 241-258).

이외에도 서독은 정부차원에서 1990년 통일 전까지 동독 정치범과 동독 군인, 동독 간행물과 동독 방문자 인터뷰 자료들을 정부 중앙기록보존소를 통해 기록화하는 정부차원의 성실한 노력을 보였다.

독일통일은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와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독·소 간 코카서스정상회담(Caucasus Summit)을 통해 통일조건으로 아래 <표 1>과 같은 8개 주요내용에 서명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냈고, 코카서스 정상회담은 20세기 동서 냉전체제 종식의 외교적 명작으로 평가할 수 있다(박삼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 2020/10/9).

<표 1> 코카서스 정상회담의 주요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독일통일은 서독, 동독 및 베를린 시를 대상으로 한다.②독일은 통일 시점을 기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다.③통일된 독일은 국가의 무제한적 주권을 행사하며 동맹 가담과 관련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 선언은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서독정부는 통일된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하기를 원하며, 동독정부도 이에 동의할 것으로 확신한다.④통일된 독일은 소련 정부와 소련군의 동독철수에 관해 조약을 체결 |
|--|

하기로 한다. 동독 주둔 소련군은 3년~4년 과도기 내에 철수한다. 또한 독소 양국은 동독에 서독 마르크화 도입을 위한 과도기 조약을 체결한다.

⑤소련군이 동독 영토에 잔류하고 있는 한 나토동맹의 동독 확대는 불가하다. 이에 따라 나토조약 제5조와 제6조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인정하고 공동의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은 불변한다. 서독 연방군은 통일과 동시에 동독과 베를린에 주둔한다.

⑥동독 영토에 소련군이 잔류하는 한 미·영·프 3개 연합군은 통일 후라도 서베를린에 주둔한다. 서독정부는 연합국에 이를 요청하고 각국 정부와 관련조약을 체결한다.

⑦서독정부는 진행중인 빈(Wein)회담(당시 독일문제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통일된 독일의 군대를 3~4년 내에 37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의무사항을 공표한다. 군대 감축은 빈 협정의 발효와 함께 실행에 들어간다.

⑧통일된 독일은 핵, 화학, 생물무기 제조, 보유 및 처리를 포기하고 비확산조약(NPT) 회원국으로 남는다.

2) 동독

동독은 1949년 10월 인민의회에서 '독일민주공화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동독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서독이 미국의 마셜 플랜 원조정책으로 혜택을 입은 반면 소련과 폴란드에게 전쟁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 다만, 정권 초기 코메콘(COMECON: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였으나, 서독과의 경제적 격차가 상대가 안될 만큼 차이가 컸고, 이로 인해 동독인들이 계속 서독으로 도주하는 등 불안정 상태는 계속되었다. 동독정부는 이러한 서독으로의 탈출 현상이 계속 늘어나자 이를 구실로 1961년에 동서냉전의 상징물인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에서는 이미 5월경부터 동독 국경을 넘어 다른 유럽지역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동독에서 매일 2,000명 규모가 대량으로 서독으로 탈출하는 통제불능 상태까지 치달았다. 이러한 동독 내 정치·사회적 혼란 상황은 동년 11월 4일 베를린에서 100만 명 규모의 촛불시위로 이어지면서 점점 확산되었고, 당시 동독 에리히 호네커 서기장의 공산정권은 이러한 갑작스런 이 대혼란 상황에 대한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무정부 상태와 같은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이하였다(dailynk 2020/9/23).

당시 언론자료를 살펴보면 1989년 8월 당시 동독 호네커 서기장은 간암 수술로 3개월간 정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상황도 아니었다. 동유럽이 민주화 바람으로 혼란기에 빠지자 동독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소련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피동적 자세로 바뀌었다. 호네커 서기장 공산정권 권력 내부적으로 일부 참모들이 서기장을 제거하려는 쿠데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분열현상도 발생했다. 동독정부는 1989년 <표 2> 주요상황과 같이 복잡한 상황에서 시위장소인 라이프찌히 중심가에 「인민군 발포명령 89-105」를 하달하고 실탄도 지급할 정도로 무력진압을 계획했으나 실제로 발포하지는 않고 작전실패로 돌아갔다(dailynk 2020/9/23).

<표 2> 1989년 동독의 주요 상황

-1989. 6. 매일 동독인 2,000명 규모 서독으로 탈출
-1989. 7. 동독인 서독으로 대규모 탈출 시작
-1989. 8. 21. 동독 호네커 서기장 간암 수술
-1989. 9. 11. 동독 반체제인사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조직
-1989. 10. 7. 소련 고르바쵸프 대통령 동독 주둔 소련군 이동 금지
-1989. 10. 7. 소련지도부, 동독 주재 코마체프 대사를 통해 동독정부의 무력진압 금지 입장 전달
-1989. 11. 7~8. 동독정부 「인민군 발포명령 89-105」 하달, 실탄 지급
-1989. 11. 8. 동독 정치국원 에곤 크렌츠 라이프치히에서 발포명령 취소
-1989. 11. 9. 베를린 장벽 붕괴, 사회통일당 지배체제 붕괴
-1989. 12. 3. 동독 정치국, 중앙위원회 총사퇴, 호네커 등 전직 고

위간부 사회주의통일당으로부터 제명

-1989. 12. 5. 호네커 서기장 연금

-1989. 12. 6. 크렌츠 국가평의회 의장 사임, 동독 사태 악화

1989년 10월 7일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동독정부의 무력진압을 반대했다. 소련은 동독 주둔 소련군은 더 이상 동독 공산정권의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동독 정부의 무력진압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dailynk 2020/9/23).

“1989년부터 1990년 10월 3일 통일될 때까지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한 동독인은 1989년에 34만 4천여명, 1990년 1월~6월 사이 23만 8천명으로 총 58만 2천 여명으로 당시 동독은 정규군 17만명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인을 통제하지 못했다”(dailynk 2020/9/30).

1989년 11월 9일 당시 동독 크렌츠 내각은 정치국원 공보담당이었던 샤보프스키를 통해 ‘여행자유화(개정안)’을 발표하게 하였다(dailynk 2020/10/3). 당시 동독정부는 동독인의 자유화 의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여행자유화 계획만을 발표하면 이것으로 동독인들이 공산정권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오히려 이 잘못된 발표로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었다.

2. 민간부문

1990년 독일통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었던 독일에 대한 연합군으로 참전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전승 4개국에 의한 동서독 분단이 종식된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 서독은 자연스럽게 미국, 영국, 프랑스 서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인 자본진영에 편입되어 국제사회에서 이들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 세계최고의 선진 복지국가 대열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동독은 분단 당시 소련

사회주의체제를 수용하고 소련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하여 국제적으로는 소련 공산진영에 편입돼 통일 전까지 공산체제를 유지하였다.

“동독은 1949-1961년 베를린장벽이 설치되기 전에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약 250만명이 탈출하자, 28년간(1961. 8. 13.-1989. 11. 9.) 베를린 장벽 길이 136km, 높이 3.6m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였다. 베를린 장벽 초소에 기관총과 지뢰, 철조망, 군건, 감시병, 감시병커, 야간 서치라이트 등을 설치하였으며, 나중에는 이 장벽에 전기선 감지경보장치까지 설치하면서 동독인의 서독행을 철저히 막았다”(문화일보 2020/12/9, 위키백과 2020/10/10).

베를린 장벽은 동서냉전체제의 상징이자 공산체제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서독은 <표 3>의 동서독 간의 국력비교 격차에도 전승 4개국으로부터 분단상황에서도 동서독 간 서신양래와 인적교류, 경제적 지원 등 교류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교류협력사업들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통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표 3> 동서독 간의 국력비교

구분	서독	동독	비교(서독/동독)
면적	35만 6천km ²	10만 8천 km ²	3.3 배
인구	6,260만 명	1,640만 명	3.8 배
병력 수	49만 5천 명	16만 6천 명	3.0 배
수교국가	162개국	134개국	1.2 배

구분	서독	동독	비교(서독/동독)
국민총생산	12조 2,452억 DM	2,837억 DM	43.2 배
1인당 GDP	20,558억 달러	9,703 달러	2.1 배
실질성장률	3.8%	1.9%	2 배
무역규모	6,111억 달러	470억 달러	13.1 배
수출	3,413억 달러	237억 달러	14.4 배
수입	2,698억 달러	233억 달러	11.6 배

출처: <http://dailynk.com/> “통일직전 동서독 간의 국력 차이는”(최종 검색일: 2020/10/5).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통일 전까지 동독인의 서독 이주에 대한 지원 금에 협력하고 수용하였다. 이러한 동서독의 교류협력은 다른 유럽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고, 1980년대 중반 소련으로부터 동유럽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에 힘입어 인접국가들이 동독인의 서독으로 탈출하는데 협력하게 하는 효과도 얻어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부터 헝가리는 동독인들이 헝가리 영토를 경유하여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는 것을 허용할 정도로 동독 탈출에 매우 협조적이었다 (조지프 S. 나이 2009, 222).

IV. 독일통일과 국제적 환경요인

1. 국제정세

독일통일은 1990년 10월 3일 이루어졌지만 어찌면 독일통일을 위한 국제정세의 기류는 대략 10년 전 1981년대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소련에 대한 ‘힘의 우위’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배제할 수 없었다. 국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1979년 1월 1일 미중수교를 기점으로 이미 미소 양극체제의 틀을 깨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외주둔 군사비용을 유용하게 관리해 나갔으나, 소련은 경제사정 악화로 해외주둔 등 군사비용을 감당해 내지 못하였다. 독일통일은 유럽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 때, 소련의 경제사정 악화로 국제체제 관리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자 미국이 당시 유럽통합을 진행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어 소련을 압박하여 결국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통일은 “①고르바초프의 신사고(New Thinking)외교노선에 따른 영향 ②서독의 동방정책과 화해정책의 성과물, ③서독이 소련에 대한 막대한 경제제공의 결과물”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dailynk 2020/9/25).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처음부터 독일통일을

찬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반대→중립화→지연→합의 패턴으로 전환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독일통일을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이러한 소련이라는 공산진영의 종주국의 리더십은 소련 내부 정치분열과 경제악화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이 축소되었거나 상실되었다. 소련은 1985년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잠시 정치·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듯하였으나, 고르바초프의 실각으로 소련공산당 권력싸움과 내부 분열은 심화되었고, 고르바초프의 실각 후 1990년 소련은 해체되고 말았다. 독일통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전 소련 등 국제정세를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소련은 1989년 10월 28일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 1968년 11월에 발표한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파기하고, 동독과 헝가리에서 소련군을 철수하였다. 그 당시 소련의 입장은 동독과 헝가리에 주둔하는 소련군의 주둔비용의 부족으로 이들 지역에 계속 소련군 주둔 비용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었다(dailynk 2020/9/26).

소련은 동독과 헝가리 등에서 소련군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서독과의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톡톡히 받아냈다. 당시 서독은 소련군 철수시기를 3~4년으로 판단했다. 이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동독 주둔 소련 점령군의 체류 및 철수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에 관한 협정」과 「소련군 기한부 주둔에 관한 조약」으로 소련이 1994년 8월 31일 동독 주둔 소련군을 완전히 철수시킨다는 것이다(dailynk 2020/10/3).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서독이 통일 전후 과정에서 소련에게 지원한 비용은 “통일과정에서 생필품 명목으로 2억 2천만 마르크, 차관형식으로 50억 마르크, 농산물 명목으로 10억 마르크를 지원했고, 통일 후에는 소련군 철수비용으로 155억 5천만 마르크를 지원” 하여 총 217억 7천만 마르크를 지원한 것으로 집계된다(통일부 2016, 57).

2. 2+4회담

독일통일은 분단 후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이 통일 될 때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전승 4개국이 국제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독일통일과정은 당시 전승 4개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때, 미국은 처음부터 독일통일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반면, 영국과 프랑스에는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선회하였고, 소련도 처음부터 반대하다가 중립, 찬성으로 선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통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시스템은 미국이 고안해 낸 2+4(동서독, 미·영·프·소)국제 합의체제였다. 2+4체제는 독일통일과정에서 역작이고 독일외교의 승리로도 평가된다(dailynk 2020/10/6).

여기에는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 유럽공동체(EC)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안보적 통합프로그램 진행과도 이해관계가 맞물렸다고 볼 수 있다. 통일 전 독일은 유럽공동체에서 약 30%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대외무역량에서 미국, 일본과 비슷한 최상위 수준이었다. 영국, 프랑스는 유럽공동체의 안전과 영향력 확대 등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맞물려 당사국들의 이익이 일치된 산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안상욱 2010, 125-147).

독일통일을 둘러싼 전승 4대국의 2+4체제 회담에서 쟁점은 “오더(Oder)-나이세(Neisse) 국경선 문제와 통일독일의 병력 상한선, 동독 주둔 소련군 철수와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잔류 문제”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dailynk 2020/9/28). 당시 미국은 베이커 국무장관이 통일 후 독일이 나토 잔류를 독일통일 조건으로 1989년 11월 28일 「독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을 제시하게 하였다. 서독은 미군이 유럽의 ‘안전보장자’로서 계속 주둔해야 한다며 소련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 그 방법으로 <표 4>와 같이 6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였다(dailynk 2020/9/28).

〈표 4〉 독일통일 6개 전제 조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²⁾ 최종 의정서의 자결권 조항에 따라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 (Four)이 동서독(Two) 통일선택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② NATO에 관한 비확대 ③ NATO가 약위가 아니고 소련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 G-7회담 적극 활용 ④ NATO,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없어도 존속한다는 것 ⑤ 통일독일을 독립적으로 NATO밖에 방치할 경우, 소련과 유럽에 매우 위협이라는 것 ⑥ 통일독일 후 소련군은 600km, 미군 4,000km 밖으로 물러나는 것을 절대수락 할 수 없다는 것 |
|--|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합의조건들은 당시 서독 콜 총리와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코카서스 회담에서 합의하면서 1990년 11월 3일 독일통일 성사로 이어졌다(홍기준 56-75, 통일부 2016, 40-71).

3. 독일통일에서 미국의 역할

1)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역할

동서독은 상호 간 원만한 교류와 당시 소련과 동유럽에 불어닥친 민주화 바람이라는 국제기류에 힘입어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의 합의, 서독과 소련의 독소 코카서스 회담 후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이루어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동유럽은 상당히 혼란을 겪었고 동독인들은 1년간 계속 서독으로 탈출행보를 하였다.

2)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1975년 헬싱키에서 창립 총 38개국이었으나 1995년 1월 이후 OSCE (유럽안보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European)는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여 56개국으로 증가하였다.

독일통일은 국제적으로 전승 4개국의 협조와 승인이 있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전승 4개국 가운데 미국의 독일통일에 대한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역할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독일통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서독지역의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해야 하고, 동독지역에 대한 절대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소련을 설득하고 독일통일에 대한 합의조건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주어야만 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였다. 만약 이러한 미국의 주도적이고 치밀한 중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독일통일은 동서독의 자체 힘만으로는 결코 통일을 쉽게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미국의 외교적 성과는 <표 5>의 진행상황과 같이 동서독의 통일외지와 미국과의 국제적 협력이 결합되면서 가능하였다(dailynk 2020/10/8).

<표 5>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미국의 역할 진행상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9. 동유럽 민주화운동 본격화 -1989. 헬무트 콜 서독 총리 독일통일 언급 -1989. 5. 미국 부시 대통령 독일통일 환영 언급(워싱턴 타임즈) -1989. 10. 24. 미국 부시 대통령 독일통일 콜 서독총리 발언, 지지 -1989. 11. 29. 미국 베이커 국무장관 「독일통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 발표, 지지 -1989. 12. 13. 영국 대처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과 유럽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계획」 발표를 지지 -1990. 2. 미국 부시 대통령 서독 콜 총리 지지 -1990. 4. 20. 부시 미국 대통령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정상회담, 독일통일 승인 약속을 받아냄 -1990. 4. 29. 부시 미국 대통령 더블린 EC특별 정상회담에서 독일통일 지지결의안 통과에 도움 |
|---|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독일통일 설득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지역에서 유럽안보공동체인 나토(NATO)와 유럽통합(EU) 과정에서의 서독과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깊은 연관성을 추

론할 수 있다 (홍기준 2008, 217-233). 통일독일은 이후 미국이 예상한대로 나토(NATO)정회원국이 되었고, G-7국가로서 미국의 외교노선에 영국, 프랑스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2) 소련의 독일통일 반대 극복을 위한 미국의 역할

1990년 당시 소련은 독일통일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독일통일을 용인할 생각조차 없었다고 본다. 소련이 독일통일을 반대한 이유는 독일통일은 사회주의 패배를 인정한다는 점, 동독주둔 소련군 주둔비용 문제, 동독은 소련의 주요 상품 공급지 상실로 경제적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1990년 독일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련이 이를 반대할 것을 우려하여 소련이 독일통일과정에서 개입과 지연을 못하게 4강회의, 4대국 대사회의, CSCE정상회의(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평화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을 제의하였다. 또 미국은 소련의 이러한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서독과 협조 하에 이를 적절히 거부하는 한편 2+4체제형식의 국제회담 개최로 2차 세계대전 전승 4개국의 동의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미국은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1990년 11월 3일 독일통일 될 때까지 <표 6> 진행과정과 같이 치밀하게 추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dailynk 2020/10/8).

<표 6 > 미국의 독일통일을 위한 역할 진행과정

-1989. 12. 19. 미국, 세바르나제 소련 외무장관 NATO사령부로 초청, 화해 분위기 조성
-1990. 2. 28. 미국, 독일통일 후에도 독일이 NATO 정회원국으로 남을 것을 서독 콜 총리와 합의
-1990. 3. 7.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 통일독일 NATO 정회원국 거부
-1990. 5.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 미국 방문, 통일독일 NATO 정회원국 합의

- 1990. 6. 미국, 더블린 EC정상회담에서 EC집행위원회로 하여금 대 소련 원조계획안 수립 결의
- 1990. 7. 5. 미국, 고르바초프에게 NATO정상회담에서 변화된 NATO에 관한 선언을 결의하게 함
- 1990. 7. 9. 미국, 휴스턴 G-7 정상회담에서 대소련 경제지원대책 결의
- 1990. 7. 16. 소련 세바르나제 외무장관, 서독 콜 총리와 코카서스 회담에서 독일통일 수락

그러면 미국은 왜 이렇게 독일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당연히 국제적 측면에서 독일통일이 미국이 주도하는 신국제질서 재편과 세계전략 등 국익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은 1945년 동서독 분단 후 서독이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고 미국의 세계전략에 따라 동맹국으로서 공동보조를 잘 맞춰왔다는 점, 만약 독일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유럽지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소련이 우려한 서독의 동독흡수통일을 냉전종식의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곧 미소 양극체제에서의 승리와 국제질서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승리라는 체제우위적 상징성도 내포돼 있었다고 본다.

V. 결론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중 G2체제 혹은 미국, 중국, EU 다극체제 아니면 무극체제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특정국가의 국제행위자로서의 ‘힘(Power)’은 시대를 초월하여 변함없이 권력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민족통일이라는 기쁨과 성취도 있었지만, 통일 후 통일후유증도 상당히 많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통일후유증은 동서독인들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후유증

으로 나타나기도 시작했으며 과거 1등국민, 2등국민, 오씨(Osis), 베씨(Wesis)와 같은 상대 비하적 용어들이 만들어질 정도로 사회적 갈등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통일후유증은 실업률, 평균수명, 경제성장, 통일비용, 통일이익, 동서독 주민 간의 갈등도 1990년 독일통일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점차 줄어들고 그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통일은 동서독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질서와 국내외적 환경, 통일국가와의 이해관계, 국익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은 1990년 독일통일을 통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범국, 패전국이라는 전쟁의 유산과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동서독의 내부적 협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역할이 없었다면 독일통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장벽들은 본문에서 수많은 난관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독일통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결국은 미국의 외교전략과 국익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독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또한 독일통일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항은 서독은 통일될 때까지 동독인이 서독으로 이주하는데 경제적 지원금을 수 년간 계속 지원해 왔다는 점이다. 민간부문의 서신왕래, 인적 교류, 문화교류 프로그램 역시 동서독이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서독의 이러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동시 노력들은 전승 4개국 뿐만 아니라, 유럽과 국제사회에서도 독일통일을 지지하게 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독일통일을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미소 양극체제에서 냉전이 종식되는 시점에서 소련의 세력약화로 동서독이 통일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1990년 당시 독일통일은 유럽통합과정 중에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미국은 독일

통일에 적극적인 중재자로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넷째 동서독은 1990년 통일전까지 꾸준히 인적교류와 문화적 교류협력 정책을 진행해 왔다는 것이다. 다섯째, 독일통일은 서독의 흡수통일 방식을 통해 이후 유럽연합(EU)과 나토(NATO) 가입함으로써 4대 전승국 간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국제사회발전에 순기능적 역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서독의 통일사례는 분단국 한반도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동서독은 동쪽끼리 동쪽상잔과 같은 내전상황은 없었다. 그러나 남북한은 1950년 6.25전쟁이라는 동쪽상잔의 비극이 있었고, 체제경쟁과 북한의 한반도 사회주의화 목표는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개발로 안보위협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과 타이완 문제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아래 양안문제로 동서독 문제처럼 쉽게 이루어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2020년 국제질서는 탈냉전 시대임에도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와 중국의 양안문제는 독일통일과 같이 동일한 분단국 통일대상 사례로 일괄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국제적 변수로서 체제경쟁적 국가일 경우, '힘의 우위'에 의한 상대의 세력약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자연스런 국가소멸 현상이 나타날 경우 어느 쪽으로의 통일이든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 이러한 변수는 탈냉전체제에서 자국실리라는 현실에서 그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통일은 1990년에 이루어졌지만 30년이라는 세월동안에 통일 후 동서독 간 사회적·경제적·심리적 갈등과 같은 통일후유증이라는 부정적 문제도 발생했었다. 통일 후 통합과정의 부정적인 사례는 향후 분단국인 한반도와 중국 양안문제에서 참고해야만 할 사안이다. 독일통일 사례는 분단국가의 통일은 결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통일과정에서 후유증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고상두·하명신. 2011. “독일 망명정책 변화의 국내적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51집 1호, pp. 241-258.
- 김용구. 2006.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미자. 2012. “한국과 독일 환경정책의 초기발전과정 비교.” 『국제정치 연구』 제15집 2호, pp. 149-16.
- 민병오. 2011. 『국제안보 쟁점과 해결』, 서울: 명인문화사.
- 안상욱. 2010. “유럽통합의 관점에서 본 독일통일: 유럽통합 진전에 따른 통일의 진전과 통합과정에서의 동유럽 통합절차와 차별성.” 『국제정치논총』 제50집 5호, pp. 125-147.
- 유숙란. 2010. “독일과 네덜란드의 이주민 정치적 통합과정 비교: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확대정책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제20집 1호, pp. 237-255.
- 이춘근. 2009.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서울: 나남출판.
- 조지프 S. 나이. 1991. 『21세기 美國 파워』, 한국경제신문사.
- 조지프 S. 나이. 2009.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서울: 한울.
- 존 베일리스·스티브 스미스. 2007.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 통일부. 2016. 『독일통일총서 외교분야Ⅱ 관련 정책문서』, 서울: 통일부.
- 헨리 키신저. 2012.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서울: 민음사.
- 홍기준. 2006. “CSCE 레짐동학(1972-1994)분석: 권력, 이익, 지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6집 3호, pp. 56-75.
- 홍기준. 2008. “유럽통합의 경로의존성과 창발성.” 『국제정치논총』 제48집 4호, pp. 217-233.
- 박삼봉통일통일정보연구소. <http://blog.daum.net/germanunification/14979145>, “독·소 코카서스 정상회담: 통일의 최대관문.” (최종검색일: 2020/10/9).
- 다음백과사전. <https://search.daum.net/search?w=tot&DA=UME&t>, “페레스트로이카.” (최종검색일: 2020/11/9)
- 위키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몰타회담.”(검색일: 2020/11/10).
- <http://dailynk.com/>. “동독 공산정권이 총 한방 못 쏘아보고 멸망한 이

- 유는?”(최종검색일: 2020/ 9/23).
<http://dailynk.com/>. “소련은 왜 독일통일을 수락하게 되었는가?”(최종검색일: 2020/9/25).
<http://dailynk.com/>. “독일통일의 최고의 공로자는 누구인가?”(최종검색일: 2020/9/26).
<https://dailynk.com/>. “2+4회담의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미국과 서독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최종검색일: 2020/9/28).
<http://dailynk.com/>. “독일이 조급한 통일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최종검색일: 2020/ 9/30).
<http://dailynk.com/>. “통일직전 동서독 간의 국력 차이는?”(최종검색일: 2020/10/5).
<http://dailynk.com/>. “21세기의 기적으로 불리는 독일통일의 과정”(최종검색일: 2020/10/3).
<https://news.joins.com/article/23864981?cloc=Joongang|sundayhome|middlenews>, “통독 2+4조약 성사뒤엔 코카서스의 기적 있었다”(최종검색일: 2020/10/6).
<http://dailynk.com/>.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은?”(최종검색일: 2020/10/8).
https://ko.wikipedia.org/wiki/%EC%B2%B4%ED%81%AC%ED%8F%AC%EC%9D%B8%ED%8A%B8_%EC%B0%B0%EB%A6%AC “체코프인트차리,”(검색일: 2020/10/10).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0901033330307001>, “베를린 장벽 28년, 붕괴 후 28년,”(최종검색일: 2020/12/9).

투고일 : 2020년 11월 12일 . 심사일 : 2020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3일

* 김주삼은 조선대에서 정치학 박사과 중국 길림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아태교류협력연구원장과 대전대 객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저서는 『북한인권실태 해결방안』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G2체제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변화양상 분석” 등이 있다.

<Abstract>

Germany's Reunification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actors

Kim, Joo-Sam

(Asia-Pacific Exchange and Cooperation Research Institute)

Germany was a war criminal and defeated nation in the World War II of 1945, but as the Berlin Wall fell on October 9, 1989, it became an officially unified nation on October 3, 1990. It, as a war criminal, was forced to be divided into West Germany and East Germany and managed by four powerful countries of the USA, England, France and Russia. Until the reunification, West Germany introduced liberal democracy system and market economy from the western world and became one of advanced countries while as East Germany introduced socialism and planned economy from Russia, it was remarkably behind in national power in comparison with that of West Germany. As fo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West Germany assimilated East Germany. Domestically, East and West Germany continued to proceed personal and material exchanges in public and private levels even under the cold war system and division condition. International factors were: First, Russia and socialist nations collapsed and the cold war system in the East and the West terminated; Second, the USA started a multiple system containing England, France, Russia, East and West Germany which were active in Germany reunification and tangible results were achieved; Third, NATO and EU had the same political,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and strategic goals. There were soci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conflicts between West and East Germany after the reunification, but as time lapsed, the internal conflicts were gradually mitigated. South and North Korea, and China and Taiwan should carefully consider such conflicts inherent in Germany's reunification for the process of reunification.

Keywords : Division of East and West Germany, Berlin Wall, Germany's reunification, International order, The 2+4 system